

“농지에 대한 패러다임 바뀔 때”

축산물도 식량, 축사 농지진입 완화해야 농지 정의 변경 사회적 공감대 절실

축산물도 식량이므로 농지법에서 정한 목적인 식량생산을 위해 축사가 농지로의 진입이 완화될 수 있도록 농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 높다.

지난 8월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축사부지 관련 농지법 개정 논의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축산업계에서 농림부 축산국, 양돈협회, 강원대 동물생명자원학부 성경일 교수가 참석했으며, 이밖에 환경단체를 비롯해 농림부 농지과장 등 농지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농지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이날 축산업계에서 성경일 강원대 교수와 양돈협회 최성현 부장은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 축산의 진출이 불가능한 것은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축산물도 식량이므로 농지법에서 정한 목적인 식량생산을 위해 축사가 농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농지 정의 변경을 둘러싼 농지법 개정 논의가 가능할 정도로 축사부지 및 축산업 관련 현안에 대한 충분한 대안 검토가 사전적으로 이뤄졌는지, 농지 정의 변경 방안이 최종적 대안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내 축사진입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축산인들의 바람이 경종 및 환경업계의 공감대로는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석자들 가운데는 농지 내 축사진입 허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축산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농지는 단순히 식량만을 생산하는 생산의 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농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식량안보와 경관보호, 환경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양돈**